

돌봄 공유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정책 방향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돌봄공유를 위한 성인지적 공공주택정책 방향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idimail.re.kr

요 약

2018년까지 150만호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우리의 주거문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정책 및 계획지침이 필요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근대산업사회 이후 공적/사적공간, 도심/주거지, 남성/여성공간이라는 이분법적인 도시 및 건축계획방법은 돌봄의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강화하거나 지속시키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던 돌봄의 책임을 남녀,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 국가가 공유하고, 일과 개인적 삶, 가족생활이 통합되도록 사회를 재조직해야 함. 물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광의의 주거복지 개념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인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롭게 정비할 필요 있음. 2018년까지 150만호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앞으로 우리 주거문화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임.

2. 정책의 추진방향

□ 주택정책에 ‘성형평성 추구’라는 목표의 포함

-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은 도시공간이 젠더중립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어 왔으며,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답습하거나 강화해 왔음. 보금자리주택정책을 비롯한 주택정책은 사회적인 성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형평성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포함하여야 함.

□ 심의 및 협의 절차에 성형평성 개선 내용의 포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형평성의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포함하고, 제34조에 심의회 및 위원회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을 포함시킴.
- 우선적으로 간략한 형태의 성형평성의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심의안에 넣어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드시 정책의 수립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위한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단기적인 방향으로 삼고, 향후 보완하여 도시 및 건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을 활용한 정책 소관부서 및 사업담당자의 자체적인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안함.

- 이외에 단지계획에 과정에서 협의를 위한 관련부서에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를 협의내용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보금자리주택 신청자격의 소득기준에서 돌봄비용 공제

-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 조건은 세대소득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가구의 육아 비용을 비롯한 돌봄의 이용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을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나 노인 부양에 대한 비용, 장애인에 대한 돌봄 비용 등 돌봄에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는 실질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공유를 지향하는 방법임. 이에 보금자리주택 신청자격의 가구소득에서 돌봄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정책효과

- (1) 돌봄공유가 이루어지는 주거지의 확대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원활해지고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2) 바람직한 주거지의 확대는 왜곡된 주거문화를 개선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계부처 : 토지주택공사, 각지방 개발공사
